

## 2005년 재정경제부 업무보고

- 머리말 -

지금 경기회복 기미가 보이는데 회복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무리해선 안 되며 천천히 견실하게 성장해서 일단 회복된 경기가 오래 가게 정책을 잘 관리해야 한다. 그동안 경제부진이 너무 긴 기간 동안 진행돼서 힘들었고, 재경부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. 정부는 6개월 이내 효과가 나타나는 단기적인 경제정책보다는 2년, 3년, 10년쯤 내다보는 중장기 대책을 세우는 데 역점을 뒀야 한다. 이것은 정책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.

주택공급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있고 시장에 맡기면 안 되는 것이 있다. 시장의 기능으로 해결되는 중형 이상의 임대주택은 시장에 맡기고,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서민형 임대주택은 공공부분이 나서야 한다. 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입주자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 등 민간임대사업자만으로는 미덥지 못한 부분이 있기에 이에 대한 제도적 대비를 해야 한다. 민간이 하는 것은 선이고 공공부분에서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. 공공부분도 경쟁도입과 혁신을 통해서 효율화가 가능한 만큼 필요한 부분에서는 과감히 나서서 수요를 충족해 나가야 한다.

부동산 수요에는 소유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주거에 대한 수요도 있기에

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임대주택정책은 부동산 공급을 위해서도 좋은 정책이다. 주무부처는 따로 있지만 재경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 줘야 한다. 대불공단 미분양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력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균형발전이 중요하다. 시장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나가자.

(세제개선에 대해서는) 세목의 일부를 지방화 하는 것은 세제부분에서 분권화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지역간 경제격차 때문에 불균형 해소에 반드시 이바지한다는 보장이 없다. 재경부는 획기적인 세제를 통해서 불균형시정을 극복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.

신용불량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전망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역량도 성장했다. 신용불량자 정책은 수준 높은 행정과 관리로 업무프로세스 혁신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다. 중소기업 대책은 지난해에 깊이 있게 실태를 분석해 맞춤형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.